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그린뉴딜,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 III: 코로나19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2021년 02월 04일 (목), 16:3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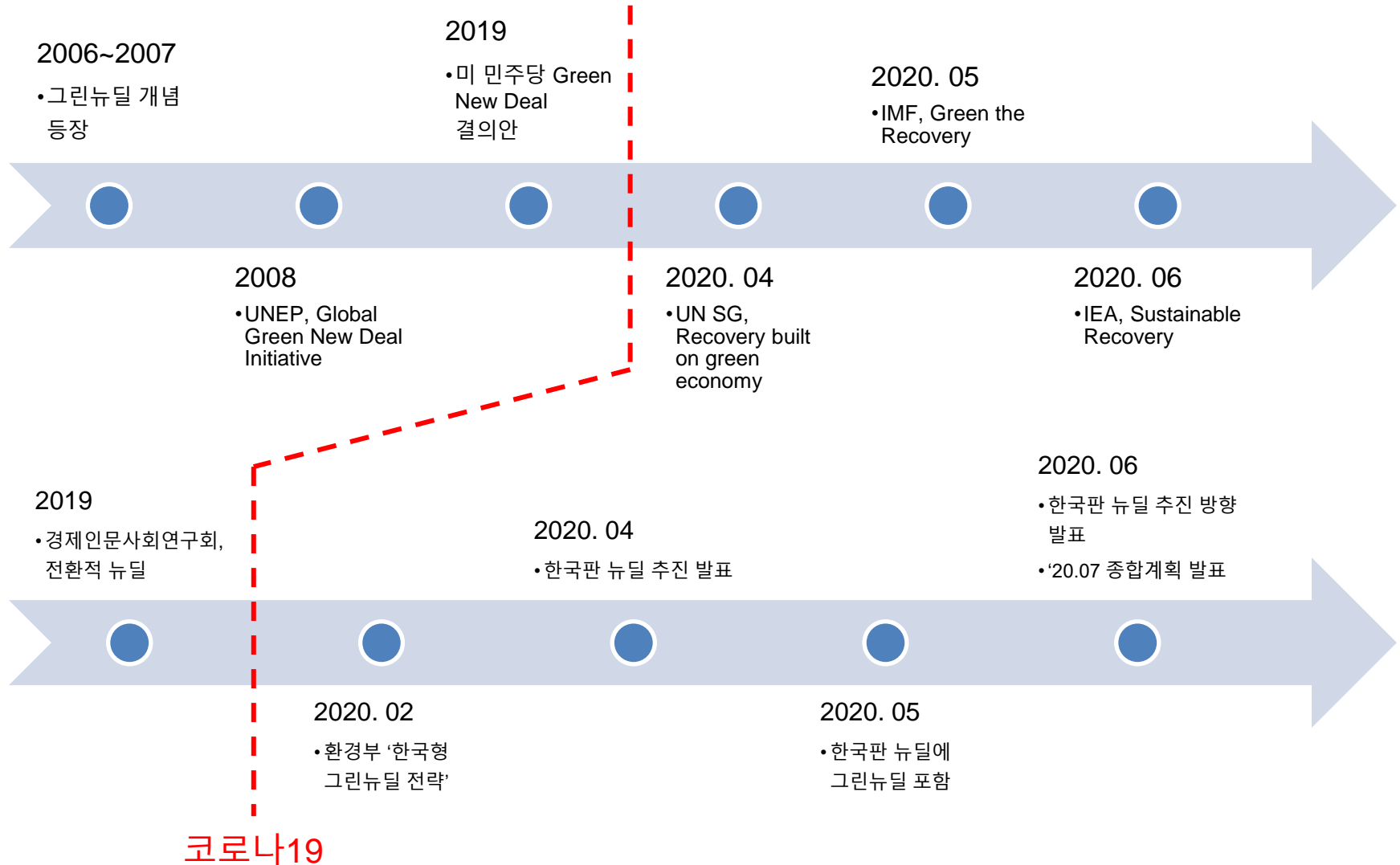
KEI 김호석

차례

- 그린뉴딜 개념과 국내외 추진 배경
- 그린뉴딜의 정의
- 경제적 효율성 측면
- 지속가능성 측면
- 결론: 정책적 함의

그린뉴딜 개념과 국내와 추진 배경

그린뉴딜 논의 동향 및 국내 도입 경과



US Green New Deal Resolution, 2019

■ 개요

- Green New Deal goals by 2030 thr. a 10-year national mobilization, "Green New Deal Mobilization".

■ 목표

- Net-zero GHG emissions
- Millions of good, high-wage jobs
-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and industry to sustainably meet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 Clean air and water; climate and community resilience; healthy food; access to nature; sustainable environment
- Promoting justice and equity

■ 경과

- GND Resolution 제출 → 상원 부결

Projects

- Building **resiliency** against climate change-related disasters
- Repairing and upgrading the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 Meeting 100 percent of the **power** demand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clean, renewable, and zero-emission energy sources
- Building or upgrading to **energy-efficient**, distributed, and "smart" power grids, and ensuring affordable access to electricity
- Upgrading all existing **buildings** in the United States and building new buildings to achieve maximum **energy** efficiency, **water** efficiency, **safety**, affordability, comfort, and durability, including through electrification
- Spurring massive growth in **clean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and removing pollution and GHG from manufacturing and industry
- Overhauling **transportation**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o remove pollution and GHG from the transportation sector
- Mitigating and managing the long-term adverse health, economic, and other **effects of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 Restoring and protecting threatened, endangered, and fragile **ecosystems**

IMF 확장적 재정 정책 권고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Country Report No. 19/132

REPUBLIC OF KOREA

2019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REPUBLIC OF KOREA

Ma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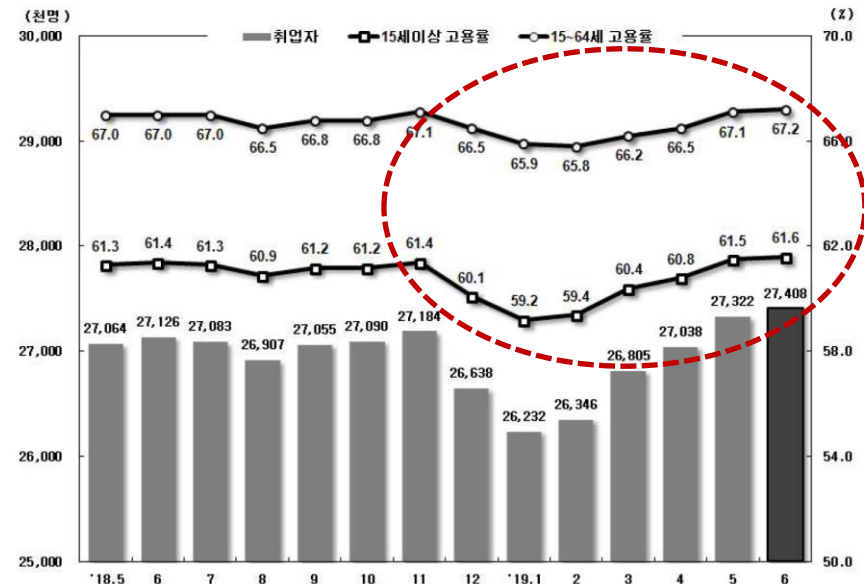
To support short-term growth and contain risks:

- The authorities should provide more fiscal stimulus this year through a supplementary budget of more than 0.5 percent of GDP, while paying attention to fiscal efficiency. Additional measures should include higher spending on targeted safety nets, childcare, training and employment services.
- Monetary policy should be eased, as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below the target for this year and next, inflationary pressures are weak, signs are emerging that inflation expectations have started to decline, and the output gap is negative.
- While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appear well contained, household debt remains a source of vulnerability. Macroprudential policies should remain tight to preserve financial sector resilience.

To promote long-term, inclusive growth and job cr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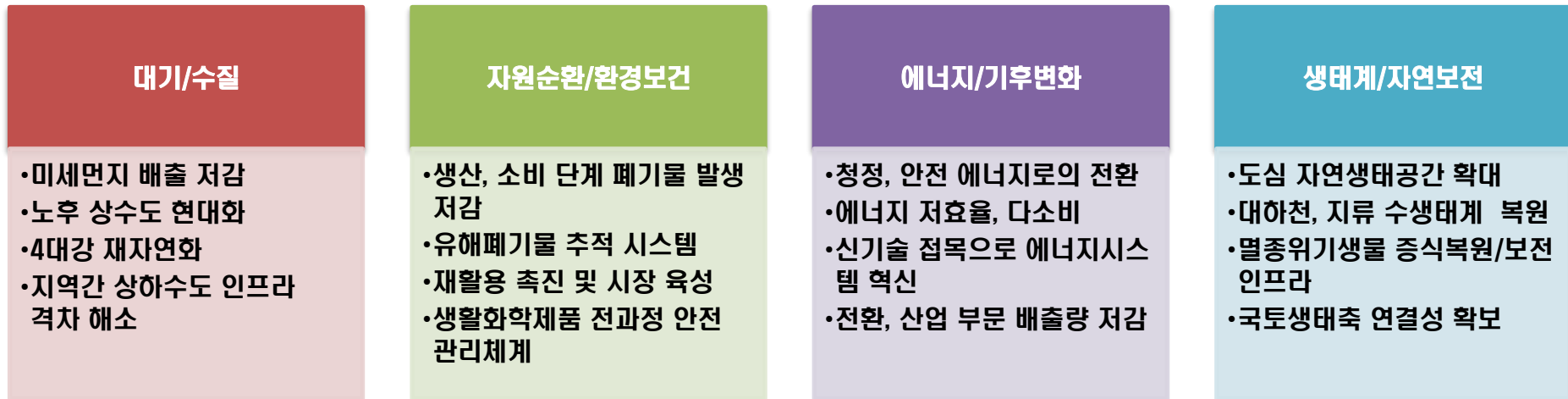
- Fiscal policy should remain expansionary in the medium-term, focusing on increasing social protection, boosting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supporting growth-enhancing structural reforms.
- Flexicurity should be adopted as a basis for labor market policies.
- Public sector job creation should be linked to developing services that cannot be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he minimum wage increase for next year should be set below labor productivity growth.
- Barriers to entry and the protection of incumbents in the product market need to be reduced further.

<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출처: 통계청, 2019년 6월 고용동향

2019년 당시 주요 환경 지출 수요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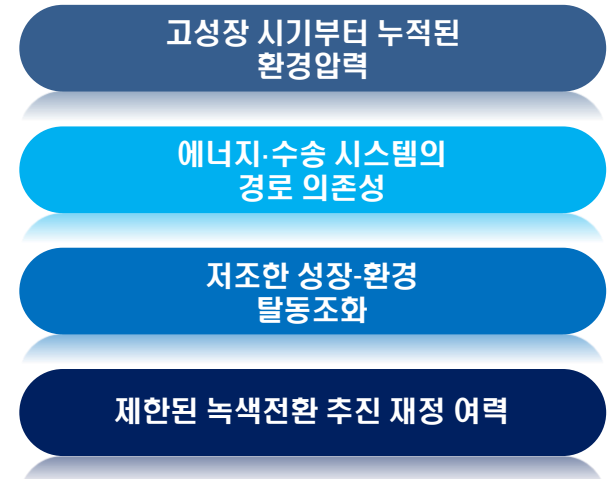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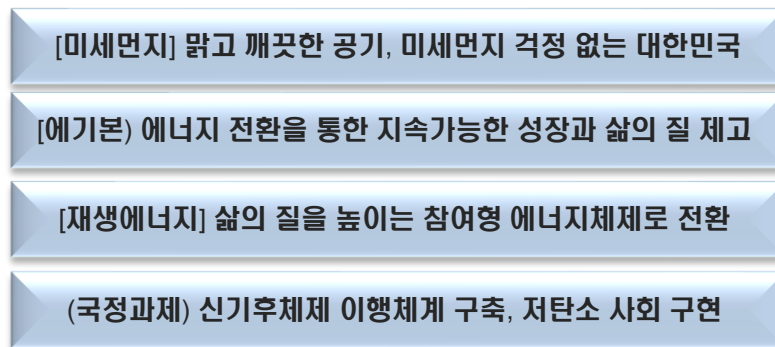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석탄의 과감한 감축	<input type="checkbox"/> 노후 석탄 조기 폐지	<input type="checkbox"/>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	<input type="checkbox"/> 석탄발전 비중 감소
<input type="checkbox"/> 재생에너지 비중 30~35% [2040]	<input type="checkbox"/> 산업부문 공정 개선, 신기술 보급	<input type="checkbox"/> 국민 참여형, 지자체 주도 보급	<input type="checkbox"/> 산업부문 총량관리 강화
<input type="checkbox"/>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input type="checkbox"/>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RPS 조정)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차 보급 확대
<input type="checkbox"/> 시장제도 개선, 빅데이터 활용 기반	<input type="checkbox"/> 전기차 보급 확대	<input type="checkbox"/>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input type="checkbox"/> 노후 경유차 퇴출

2019년 그린뉴딜 제안 (김호석, 2019)

○ 2019년 당시 녹색전환 노력과 도전 요인

우리 사회 녹색전환 노력



○ 그린 뉴딜의 기본방향

- 지역 환경공공재 공급 (상하수도, 폐기물) → 도시, 농촌 재생 + 환경 사업
- '미세먼지-에너지전환-온실가스' 통합형 → '에너지 부문-수송 부문-건물 부문' 연계형
- 디지털 기술 주도 기술 변화 대응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패턴
- 재정정책, 환경정책, 금융 제도 정비 → 녹색금융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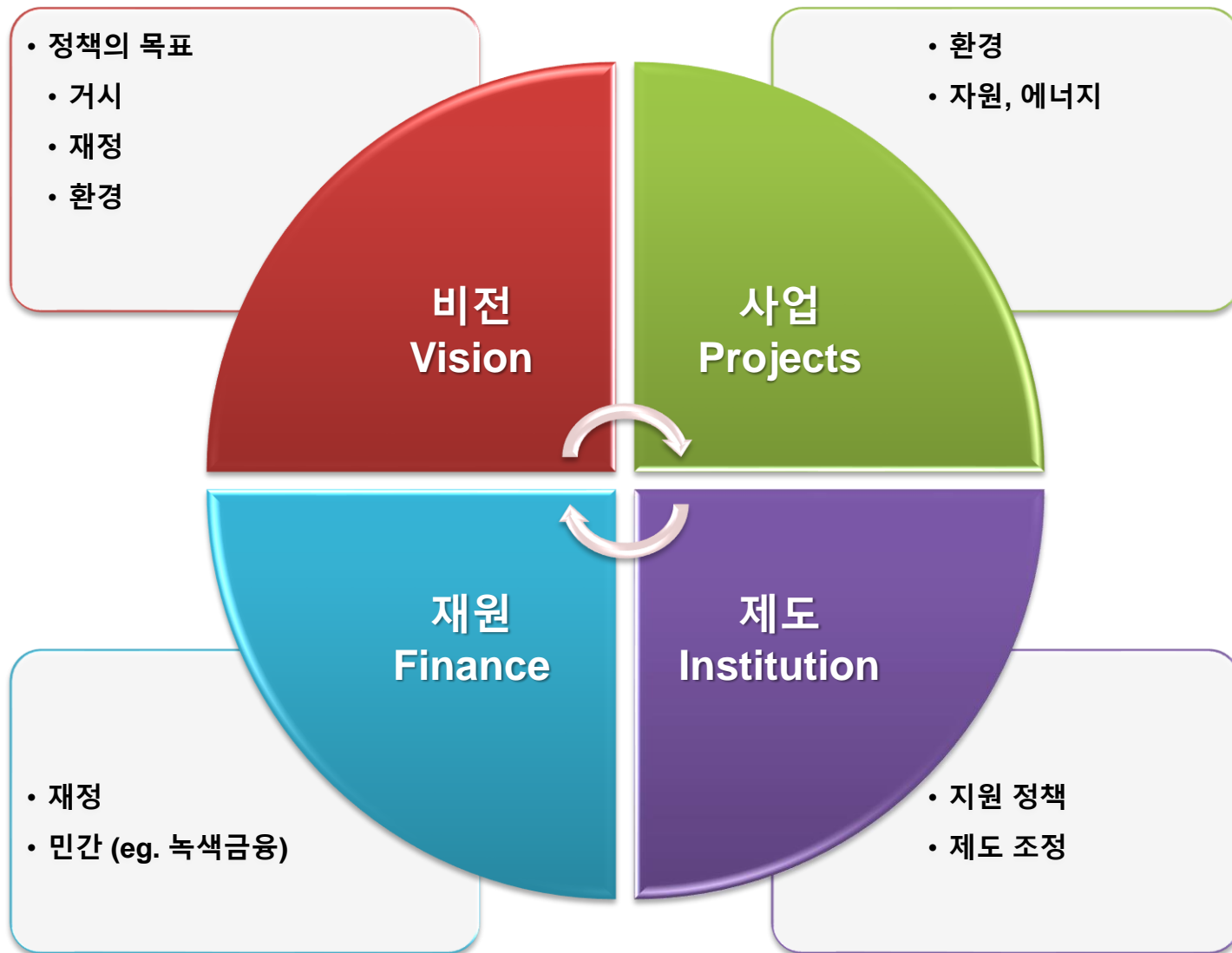
출처: 김호석(2019)

국내 그린뉴딜 제안

2019년 그린 뉴딜 제안 (김호석, 2019)		2020년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분야	사업	분야	사업
포용적 녹색전환: 생활-지역 밀착형 환경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밀착형 환경 인프라 강화 사업, 환경 인프라 통합형 도시재생 지원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 시설 정비 사업 	도시·공간·생 활 인프라 녹색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 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전환적 대기환경 대응: 미세먼지-에 너지전환-기 후변화 통합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저감 및 인체위해성 기반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사업 미세먼지-에너지소비-온실가스 통합 인벤토리 구축 및 통합형 전문가 양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미래 녹색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형 단지-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산업혁명 기술과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기반의 '녹색에너지 전환지구' 지정 사회적 가격(social pricing) 산정 및 이를 반영한 사회경제성 평가 체계 개발 디지털 전환 기반의 에너지 생산·소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지속가능금융 강화: 규제 개편, 지속가능금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금융, 그린파이낸스 확산을 통한 민간 자본 유입 촉진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그린뉴딜의 경제학적 정의

그린뉴딜 정책의 구성



그린뉴딜, 경제학적 정의

▪ 정의

- 환경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조절 목적의 재정지출
→ [단기] stimulus package + [장기] environmental inves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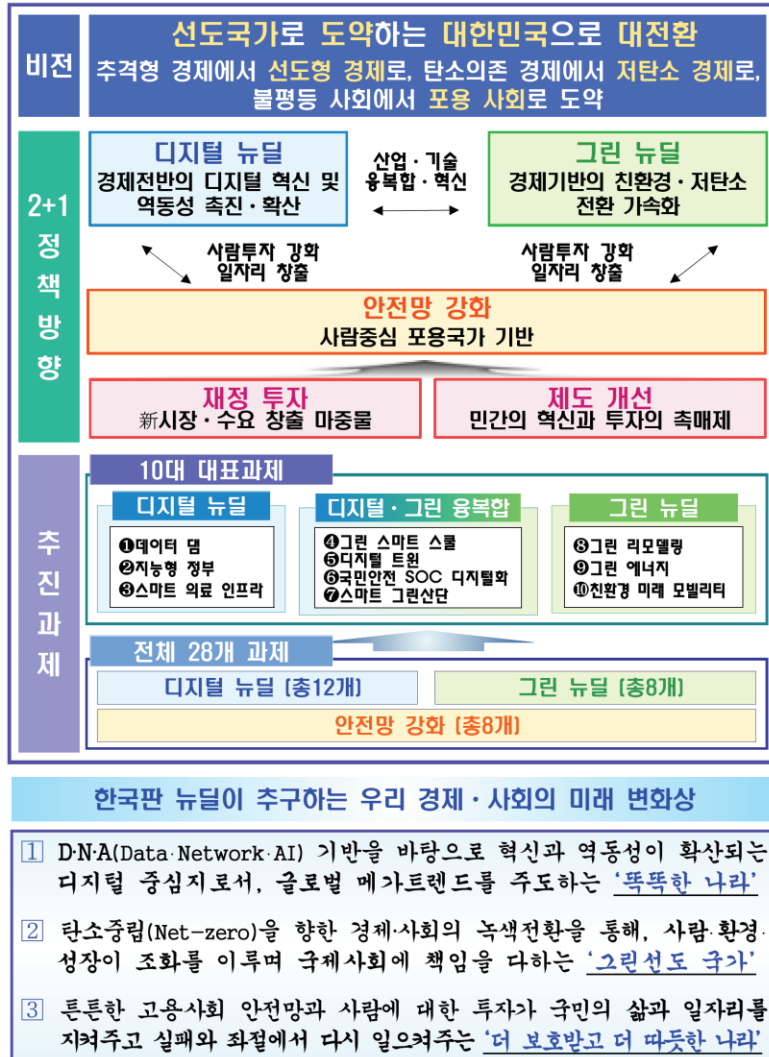
▪ 그린뉴딜 정책 효과

- [거시] 경기부양, 고용 창출
- [후생] 재정 지출을 통한 시점간(세대 포함), 부문간 자원 배분
- [환경] 환경 공공재 공급

▪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목적

- 코로나19 경기 대응
- 친환경, 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 (디지털 뉴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
→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
* '20년 UN 전자정부평가(7.11): 193개국 중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온라인 참여자수 공동 1위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
·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新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경쟁력 강화
- (그린 뉴딜)**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
·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親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
- (안전망 강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 →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
·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 혁신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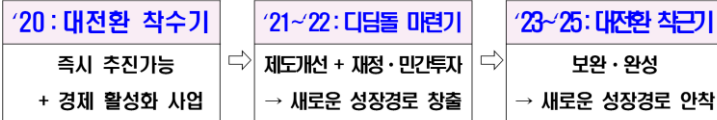
- [인프라]**
- ① 그린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1만여호, 공공건축물 800여건
 - ② 「그린스마트스쿨」 실행계획 수립(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 설치 등)
 - ③ 스마트그린도시, 대상 지역 공모·선정(25개)
 - ④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 [에너지]**
- ① 스마트전력망, 아파트 40만호에 AMI(지능형전력계량기) 보급
 - ② 전국계통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예측) 시스템 구축(전력거래소)
 - ③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도입(10월, 시행령 개정) 등 확산 기반 확충
 - ④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방안」 마련, 부생수소 유통망 구축 추진 등
 - ⑤ RE100 이행 지원방안 등 기업·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수요확대 유도
 - ⑥ 친환경차 보급: (전기차) 13.8만대, (수소차) 1.1만대(누적, 12월), (전기충전기) 3.5만대기, (수소충전소) 70기(누적, 12월)
- [생태계]**
- ①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프로젝트, 41개사 선정(22년까지 100개사)
 - ② 스마트그린산단 7개소 지정(창원 등) 및 액션 플랜 수립
 - ③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안내서)」 발간(12월, 환경부공유)

출처: 관계부처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투자 계획

1 투자 전략

◇ '20년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 집중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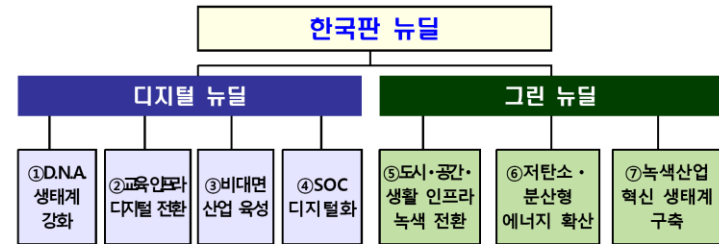


- (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 투자(3차 추경)
- (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 (대전환 착근기, '23~'25)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 누적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2 '25년까지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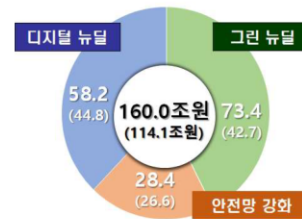
- (디지털 뉴딜) 총사업비 58.2조원(국비 44.8조원) 투자, 일자리 90.3만개 창출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 생태계(국비 31.9조),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1조), SOC 디지털화(국비 10.0조) 등 집중투자
- (그린 뉴딜)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1조), 신재생에너지(국비 24.3조), 녹색산업 육성(국비 6.3조) 등에 집중투자
- (안전망 강화) 총사업비 28.4조원(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 33.9만개 창출
 -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국비 22.6조) +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 확대(국비 4.0조)

- ◇ '22년까지 총사업비 67.7조원(국비 49.0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 ◇ '25년까지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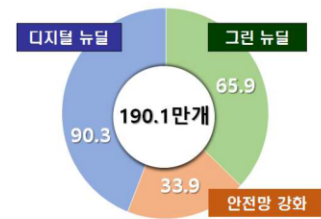


안전망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투자]

분야별 총사업비(국비)(~'25, 조원)



분야별 일자리(~'25, 만개)



총투자계획 (총사업비(국비), 조원)

구분	'20추경~'22	'20추경~'25
합계	67.7 (49.0)	160.0 (114.1)
① 디지털 뉴딜	23.4 (18.6)	58.2 (44.8)
② 그린 뉴딜	32.5 (19.6)	73.4 (42.7)
③ 안전망 강화	11.8 (10.8)	28.4 (26.6)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개)

구분	'20추경~'22	'20추경~'25
합계	88.7	190.1
① 디지털 뉴딜	39.0	90.3
② 그린 뉴딜	31.9	65.9
③ 안전망 강화	17.8	33.9

* ('20추경~'25)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경제적 효율성

거시경제

- 재정지출의 규모
- 재정지출 시점
- 사업 구성

<표 4> 경기 상태에 따른 재정 승수 차이

	확장	하강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 미국	0	1.7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2b), OECD	-0.2	0.5
Auerbach and Gorodnichenko (2014), 일본	1	2.4
Batini and others (2012), 표본국가	0.82	2.08
Baum and others (2012), G6	0.72	1.22
Canzoneri and others, 2012, 미국	0.89	2.25
Hernandez de Cos and Moral-Benito (2013), 스페인	0.6	1.3
Owyang, Ramey, Zubairy (2013), 미국	0.7	0.8
Owyang, Ramey, Zubairy (2013), 캐나다	0.4	1.6

출처: Batini et al.(2014)에서 발췌 작성.

<표 3> 분야별 재정지출의 재정·고용 승수 (당해 연도 효과 기준)

	재정지출 승수 (조원/조원)	고용 승수 (천명/조원)
일반지방행정	0.1184	0.2425
공공일서 및 안전	0.4732	0.7106
외교·통일	0.4199	0.7059
국방	0.5410	0.8092
교육	0.1191	0.2485
문화 및 관광	0.2453	0.4674
환경	0.3094	0.1140
사회복지	0.1132	0.2390
보건	0.1766	0.2957
농림수산	0.2426	0.241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0575	0.1018
교통 및 물류	0.1545	0.2040
통신	-1.2303	-1.5891
국토 및 지역개발	0.1267	0.1897
과학기술	0.1145	0.2615

출처: 이강구 외(2016)

<그림 3> IEA의 주요 에너지사업 고용 창출 및 저감비용 평가(지구적 평균)



출처: IEA(2020b)

후생경제

<표 5> 코로나19 복구 재정지출 잠재적 분야와 세대 간 편익 귀착

	경제·사회 분야	환경 분야
현재 세대	보건, 복지, 노동	미세먼지
미래 세대	SOC, R&D	생태계, 기후변화

		20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원, %)					
	구분	'19	'20	'21	'22	'23	AAGR
	총지출	469.6	513.5	546.8	575.3	604.0	
		100.0	100.0	100.0	100.0	100.0	(6.5)
1	보건·복지·고용	161.0	181.6	198.4	213.2	229.1	
		34.3	35.4	36.3	37.1	37.9	(9.2)
2	교육	70.6	72.5	76.0	79.1	82.0	
		15.0	14.1	13.9	13.7	13.6	(3.8)
3	문화·체육·관광	7.2	8.0	8.3	8.6	9.0	
		1.5	1.6	1.5	1.5	1.5	(5.4)
4	R&D	20.5	24.1	26.7	28.7	30.9	
		4.4	4.7	4.9	5.0	5.1	(10.8)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23.9	26.4	28.0	29.9	
		4.0	4.7	4.8	4.9	5.0	(12.4)
6	SOC	19.8	22.3	23.4	23.7	23.7	
		4.2	4.3	4.3	4.1	3.9	(4.6)
7	농림·수산·식품	20.0	21.0	21.5	21.9	22.2	
		4.3	4.1	3.9	3.8	3.7	(2.6)
8	환경	7.4	8.8	9.6	10.1	10.6	
		1.6	1.7	1.8	1.8	1.8	(9.3)
9	국방	46.7	50.2	53.4	56.4	59.5	
		9.9	9.8	9.8	9.8	9.9	(6.2)
10	외교·통일	5.1	5.5	5.9	6.3	6.6	
		1.1	1.1	1.1	1.1	1.1	(6.9)
11	공공질서·안전	20.1	20.9	21.8	22.7	23.5	
		4.3	4.1	4.0	3.9	3.9	(4.0)
12	일반·지방행정	76.6	80.5	82.4	84.3	86.1	
		16.3	15.7	15.1	14.7	14.3	(3.0)

		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조원, %)					
		'20	'21	'22	'23	'24	AAGR
		512.3	555.8	589.1	615.7	640.3	
		100.0	100.0	100.0	100.0	100.0	(5.7)
		180.5	199.9	217.4	230.2	242.7	
		35.2	36.0	36.9	37.4	37.9	(7.7)
		72.6	71.0	74.2	75.4	77.9	
		14.2	12.8	12.6	12.2	12.2	(1.8)
		8.0	8.4	8.8	9.2	9.4	
		1.6	1.5	1.5	1.5	1.5	(4.2)
		24.2	27.2	29.1	30.7	32.0	
		4.7	4.9	4.9	5.0	5.0	(7.2)
		23.7	29.1	32.3	34.2	35.6	
		4.6	5.2	5.5	5.6	5.6	(10.7)
		23.2	26.0	27.8	28.7	29.3	
		4.5	4.7	4.7	4.7	4.6	(6.0)
		21.5	22.4	23.0	23.3	23.5	
		4.2	4.0	3.9	3.8	3.7	(2.3)
		9.0	10.5	11.4	12.1	12.6	
		1.8	1.9	1.9	2.0	2.0	(8.7)
		50.2	52.9	56.1	58.6	60.9	
		9.8	9.5	9.5	9.5	9.5	(5.0)
		5.5	5.7	6.0	6.2	6.5	
		1.1	1.0	1.0	1.0	1.0	(4.1)
		20.8	21.8	22.8	23.7	24.6	
		4.1	3.9	3.9	3.8	3.8	(4.2)
		79.0	86.5	87.6	92.0	94.9	
		15.4	15.6	14.9	14.9	14.8	(4.7)

환경경제

유형	설명
낮은 기회비용	• 자본과 노동이 유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낮은 직접비용(자본·노동비용)과 간접비용(경쟁력 손실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
규모의 경제	• 사업 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평균비용 하락
범위의 경제	• 관련 사업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 비용이 감소하거나 사업 편익이 증가

■ 사업비 절감

➤ 자본, 노동 유휴상태 → 동일 사업을 낮은 비용에

■ 규모의 경제

➤ E.g. 신재생에너지

■ 범위의 경제

➤ E.g. 수소에너지, 녹색산단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개념과 국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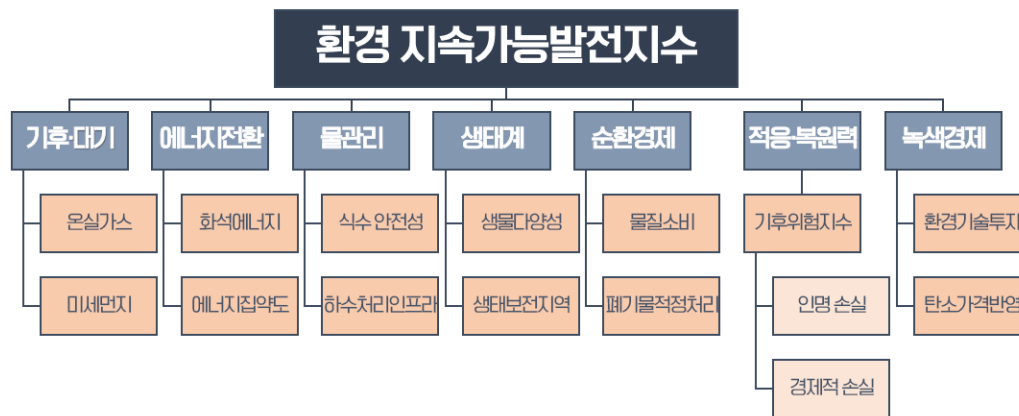
<표 7> 지속가능성의 유형 및 정의

	‘계약 모델’		‘영역 모델’	
	경제적 제약	생태적 제약	균형(balance)	통합
핵심 요소	성장, 자연자본	성장, 생태계	사회, 경제, 환경	사회, 경제, 환경 영역 간 연계성
지속가능성 정의	녹색 황금률 (green golden rule)	정상상태 (steady-state)	균형 발전 (balanced development)	통합성, 정합성

<표 8> 2020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환경부, 2020)

목표 달성 구분	분야별 해당 지표
현 추세면 2030 목표 달성 가능	(사회) 농가·어가소득, 평생학습·직업교육훈련 참여율, 의회 여성 비율, 신생아사망률 (경제) 여성고용률,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사고대비 화학물질 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연구개발비 (환경)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해수 수질, 산림복원면적
현 추세로 2030 목표 달성은 곤란하나, 목표 방향으로 진행 중	(사회) OECD 더 나은 삶의질 지수, 상대빈곤율, 자살률 (경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남녀임금격차, 교통약자 이용편의 보장률 (환경) 수질등급달성률, 친환경차 확대 수, 1차에너지대비재생에너지 비중
정체 상태	(사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55세 이상 고용률, 공공병상 수 (경제) 실질 GDP 성장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환경) 하수처리수 활용률,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최근 추세가 목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사회) 장애인 만성질환유병률, 다문화학생 학업중단률 (경제)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관광분야 GDP 기여율, 국민 환경의식 수준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산림면적 비율, 상수도 사용량 (기타-협력) 개도국에 대한 투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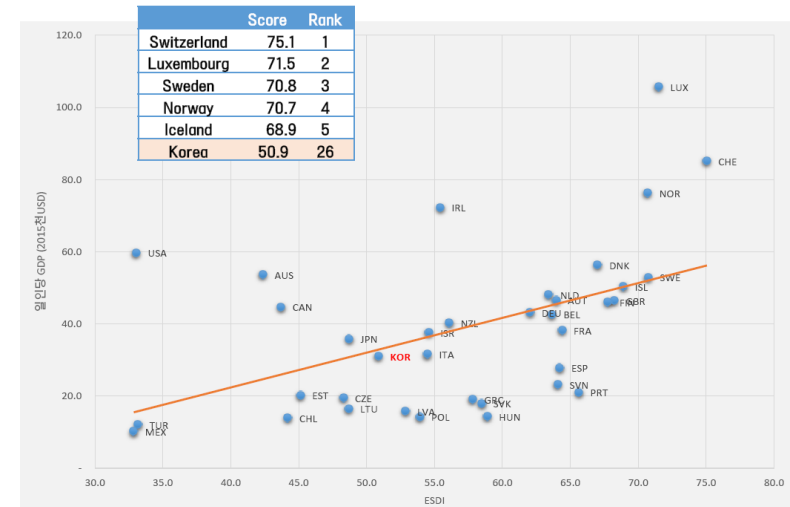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김호석 2020)



<그림4> 환경 지속가능발전지수: 우리나라 평가 결과와 OECD 비교



자료: 김호석 (2020b)



그린뉴딜의 지속가능발전 영향 (김호석, 2020)

<표 10> 우리나라 그린 뉴딜 정책의 잠재적 지속가능발전 영향

목표	잠재적 영향
SDG8 고용/성장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녹색전환 촉진)
SDG9 산업/혁신/인프라	지속가능발전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과 산업의 녹색화를 통한 녹색경제 이행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디지털 접목 녹색 인프라 공급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
SDG13 기후변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제고
SDG6 물/위생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식수 안전과 물사용 효율 제고
SDG10 형평성 제고	소득에 역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해소하는 한편, 각종 지원제도 시행하여 높은 수준의 형평성 달성
SDG16 평화/제도/정의	국민참여형 그린뉴딜 사업 마련을 통해 참여적, 포용적, 투명한 의사결정 이행
SDG17 이행수단 강화/파트너십	재정정책, 산업정책, 환경정책 정책통합성 제고 그린뉴딜을 개발협력과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결론 및 정책적 함의

결론

■ 정책 적합여건

- (거시경제)경기 하강 국면에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 (후생경제)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 분야 지출의 사회후생 증가 효과가 크고, 사업의 세대 간 편익 귀착에 일관된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될 경우,
- (환경경제) 경기침체기 민간의 경제활동과 경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연관된 사업을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뉴딜식'재정지출은

- 재정·고용 승수가 크고 일반적 분야별 예산을 통해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투입

■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는

- 상대적으로 달성도가 낮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정책목표로 삼는 경우)를 중심으로 사업이 선정·추진

정책적 함의

- 첫째, 경제활동 위축이 상대적으로 큰 부문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추진
- 둘째,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지출이 현재세대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구축하지 않도록 재정여력을 배분하고,
- 셋째, 스마트 그린산단이나 수소시범도시처럼 연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감사합니다